

제368호 (2012. 7. 9)

■ 경제 동향

- 6월 CBSI 1.6p 하락한 63.8 기록

■ 정책 · 경영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간 건설공사 규모 1.4조원에 불과
- 2012년 상반기 계약 관련 주요 개정 법규(I)

■ 정보 마당

- 2012년 런던 올림픽 건설 사업 예산 증액 원인과 해법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해외건설 수주 붐 이어가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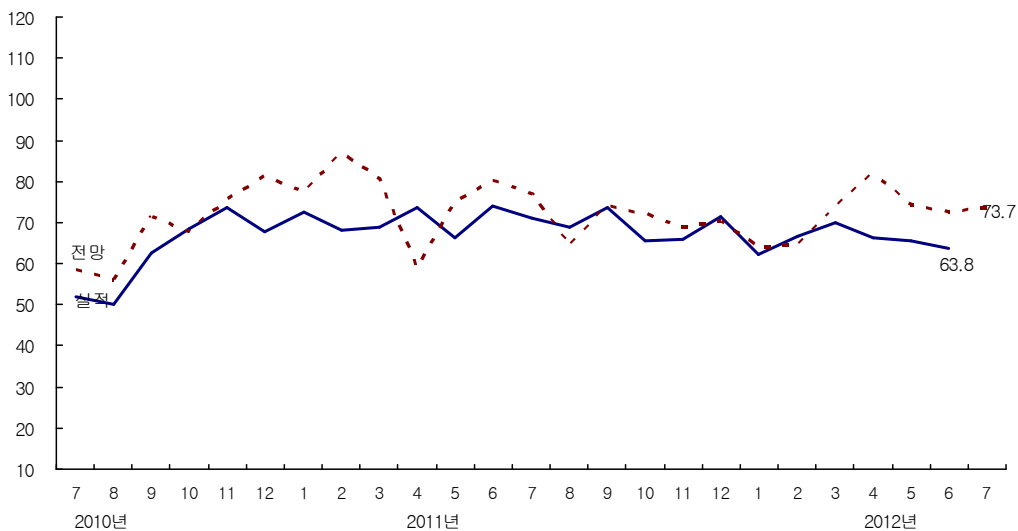
6월 CBSI 1.6p 하락한 63.8 기록

- CBSI 3개월 연속 하락, 중견업체가 하락 주도 -

■ 6월 CBSI 전월비 1.6p 하락한 63.8...1월 제외하고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

- 2012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6p 하락한 63.8을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6.1p 하락)했으며, 건설 비수기인 1월 (62.3)을 제외하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CBSI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2010년 3~5월 동안 18.1p가 하락한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임.
 - 당초 5월에는 6월 CBSI 전망치가 72.6을 기록해 5월 실적치(65.4)보다 7.2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6월 실적치는 오히려 전월보다 1.6p 감소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음.
 - 이는 5.10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지방의 주택시장마저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한 가운데, 5월 초 풍림산업에 이어 6월에도 우림건설, 벽산건설 등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감이 급증한 때문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중견업체 지수 8.3p 하락해 CBSI 하락 주도,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6월 CBSI 하락을 주도한 반면,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함.
 - 지난 5월에 전월비 13.7p 하락한 58.3을 기록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6월에도 전월비 8.3p 하락한 50.0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6월의 CBSI 하락을 주도함.
 - 한편,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0.6p 상승한 92.9를 기록했으며, 중소기업 지수도 전월비 3.8p 상승한 45.6을 기록함.
 - 다만, 중소기업 지수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아직 50선을 밑돌아 체감 경기는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황임.

<업체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1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68.9	73.8	65.4	66.0	71.6	62.3	66.7	69.9	66.4	65.4	63.8	72.6	73.7	
규모 별	대형	76.9	100.0	84.6	84.6	83.3	76.9	92.9	85.7	71.4	92.3	92.9	84.6	107.1
	중견	75.0	73.1	68.0	64.0	68.0	69.6	58.3	68.0	72.0	58.3	50.0	66.7	56.0
	중소	52.6	43.9	40.0	46.4	61.8	36.8	45.6	53.4	54.1	41.8	45.6	65.4	54.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7월 전망치는 6월 실적치 대비 9.9p 상승한 73.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9.9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7월에는 건설 경기 침체 수준이 6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임.
 - 6월 28일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건설 경기 부양책이 포함되었지만 당장 7월의 건설 경기를 개선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통상 7월에는 휴서기로서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3개월 연속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CBSI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간 건설공사 규모 1.4조원에 불과

-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쳐, 세계 5대 강국 도약 위해선 국내 시장의 적극적 활성화 필요 -

■ 정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 투자 계획 천명

- 2009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규모는 1,620억 달러(약 188조원)로 풍력이 40%, 바이오 연료가 30%, 태양광이 20%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전망
- 2009년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을 제정
 -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5년 간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
 - 2015년에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수출이 362억 달러에 달하는 등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도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해 관련 업체의 도산 등 실제 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관련 건설공사 연간 규모 1.4조원에 불과,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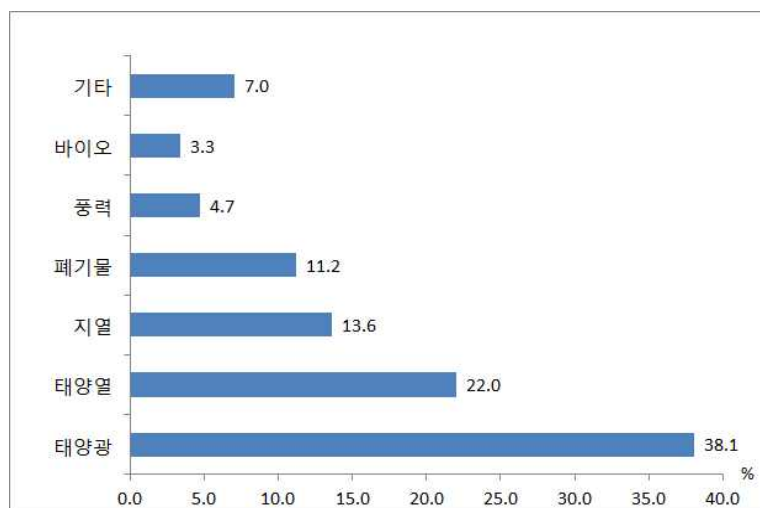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 관련 건설공사 규모는 2010년도에 1조 4,170억원으로 파악됨.*
 - 신재생에너지 공사를 수행한 업체는 전체 건설업체(전기통신업체 포함)의 1.4%에 불과한 실정
 - 관련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1,331개 업체로 그 중에서 전기통신업체(39.4%) 설비업체(22.8%)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종합건설업체들은 전체 공사액의 67.8%에 해당하는 6,910억원의 공사를 담당, 업체당 평균 관련 공사 규모는 24억원으로 파악됨.
 - 건설업 전체 매출액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수준

* 통계청,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2012. 4.

■ 태양광 및 태양열 관련 공사가 60.1% 차지...설비설치 공사가 주류 형성

- 공종별로는 태양광 공사가 전체 공사의 38.1%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태양열 공사가 22.0%로 2위를 차지
 - 공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폐기물 및 풍력발전 시설은 각각 11.2% 및 4.7%를 차지
- 종합건설업체들은 바이오 및 폐기물 관련 에너지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체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공사 참여 비중은 49.1%를 차지했으며, 폐기물에너지 39.3%, 지열 관련 공사 25.9%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신재생에너지 형태별 건설공사 구성 비중>



■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내 시장의 적극적인 활성화 필요

- 2015년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책 목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함.
 - 연평균 투자 계획이 8조원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공사 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황
 - 사업 실적을 중시하는 세계 시장에서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 경험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단순 설비 부착 방식의 사업에서 탈피, 대단위 복합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권오현(연구위원 · ohkwon@cerik.re.kr)

2012년 상반기 계약 관련 주요 개정 법규(I)*

-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 계약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시행일 : 2012. 3. 21)
 -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제7조제2항 신설)
- 계속비 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시행일 : 2012. 3. 21)
 -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체결하도록 계속비 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제21조제1항 신설)

■ 계약 예규 개정 주요 내용

-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도 도입(시행일 : 2012. 1. 1)
 - 발주기관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신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개정
- 계약 금액 조정시 적정성 검토 강화(시행일 : 2012. 1. 1)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시 적정성 검토를 원가 계산 용역 기관에 의뢰토록 함.
 -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 및 제 70조의5 개정
- 혁신도시 지역의무 공동도급 관련 지역 업체 요건 효력 기한 연장(시행일 : 2012. 1. 1)
 - 혁신도시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 업체 90일 요건 규정의 효력 만료 기간을 현행 2011년 12월에서 2013년 12월로 2년 연장
 - ※ 「공동계약 운용요령」 부칙 제2조, 「공사입찰유의서」 부칙 제2조 개정
- 예정가격 산정시 최신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시행일 : 2012. 4. 2)
 - 발주기관이 최신 표준품셈 대신 물량이 적게 산정된 과거의 표준품셈을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낮추는 것을 방지
 - ※ 「예정가격 산정기준」 제6조 개정

* 본고는 2012년 상반기에 개정된 주요 계약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설로,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임.

- 입찰 서류 진위 여부 심사 의무화(시행일 : 2012. 4. 2)
 - 발주기관은 낙찰 예정자에 대해 낙찰 결정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 입찰 서류가 부정·허위 서류로 판명되는 경우 낙찰 취소
 -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7조, 제98조
-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시행일 : 2012. 4. 2)
 -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만료 후 입찰에 참가할 경우 당해 제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신인도 감점(-2점)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2], [별표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 분담금 미납시 탈퇴(시행일 : 2012. 4. 2)
 - 구성원이 공사 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출자 비율을 고려하여 미납분에 상응하는 기성 대가의 지급을 유예하며, 일정 수준 이상 미납할 경우 탈퇴 조치
 - ※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주계약자 방식 선택시 입찰 경쟁성 고려(시행일 : 2012. 4. 2)
 -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 선택시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수가 입찰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토록 의무화
 -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
- PQ 재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허용(시행일 : 2012. 4. 2)
 - PQ 통과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결격 사유로 탈퇴한 경우 PQ 재심사를 위해 신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
- 등록 기간 3년 미만인 신설 업체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평가 완화(시행일 : 2012. 5. 1)
 - 10억원 미만 공사 : 3년 실적 1/2배 이상 → 평가 면제
 - 10억~50억원 미만 공사 : 3년 실적 2배 이상 → 1/2배 이상
 - ※ 「적격심사기준」 [별표]
- 최저가낙찰제 저가 심사시 노무비 심사 강화(시행일 : 2012. 5. 1)
 - 1단계 심사시 모든 적정 공종의 노무비를 심사하여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 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낙찰 배제
 -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15조, 제21조

김영덕(연구위원 · kyoduk@cerik.re.kr)

2012년 런던 올림픽 건설 사업 예산 증액 원인과 해법*

- 영국 정부의 사업 규모 예측 실패, 과학적 비용 측정 시스템 도입 필요 -

■ 당초 예산 18억 파운드(2002년 기준)에서 93.25억 파운드(2007년 기준)로 증액**

- 2004년 IOC에 보고된 입찰 서류에는 42억 파운드였으며, 2007년 영국 정부의 공식 검토를 통해 최종 93.25억 파운드로 조정되었음.
- 올림픽 시설 건설 비용은 영국뿐만 아니라 1976년 올림픽 이래로 평균 200% 이상 증액된 것으로 조사됨.

■ 시설 규모 변경과 예비비 증액이 가장 큰 변화 요소

- 당초 예산에 비해 토목 및 건축 시설비와 예비비가 가장 크게 늘어났음.
 - 2007년 금액 기준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예산 변화는 10% 정도에 불과
 - 보안 관련 비용은 2007년 이전에서 저평가되거나 누락되었음.
 - 최종적으로는 6억 파운드로 산정되었으며, 세금 관련 비용은 당초 예산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 건설비가 저평가된 주요 사유

- 영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한 핵심 가정과 예측 실패
 - 올림픽 빌리지에 대한 민간 투자분의 과다 책정으로 정부 예산의 증액을 초래
 - 영국 재무부의 자체 가이드와 예산 산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 예비비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계획만으로 건설비를 산정
- IOC 위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사업 계획
 - 2012년 런던 올림픽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전혀 다른 대

* 본고는 다음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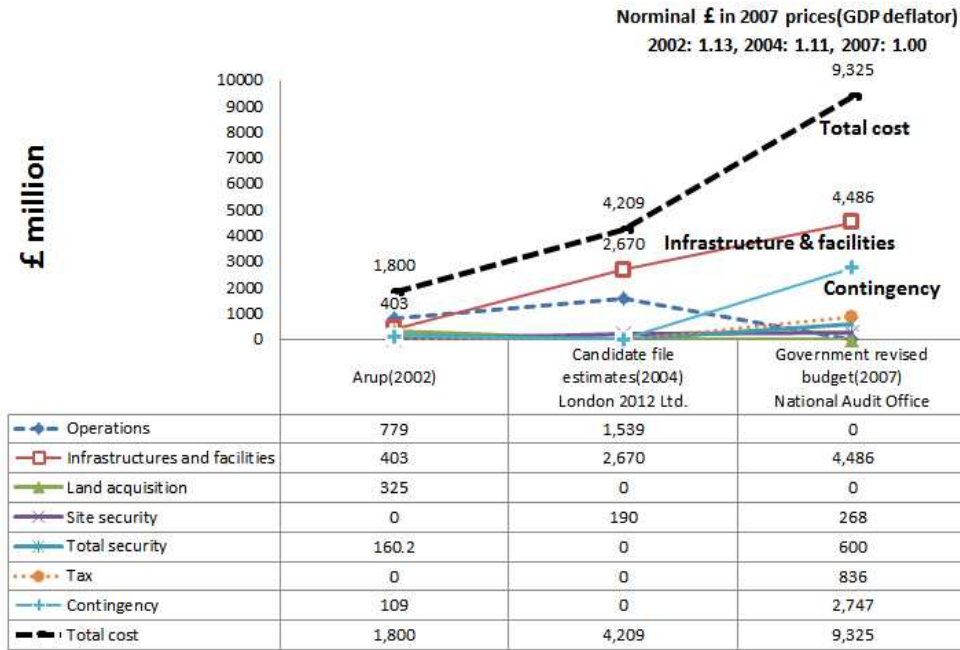
Jennings, Will, "Why Costs Overrun: Risk, Optimism and Uncertainty in Budgeting for the London 2012 Olympic Games,"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Tylor & Francis, June 2012, 30, pp.455~462.

** 2012년 6월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3조 2,500억원에서 약 16조 8,500억원 증액된 것임.

테러 대비 투자가 발생함. 시설 및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기존 올림픽에 비해 훨씬 큰 건설비가 소요됨.

- 주경기장은 당초 2.8억 파운드에서 5.47억 파운드로, 수영장은 0.75억 파운드에서 3.13억 파운드로 예산이 증액됨.

<2012 런던 올림픽 시설 예산 내역 변화>



주 : Jennigs 2012, p. 457에서 재구성

- 기술적 성능과 사업 외적 요소(경제, 안보 등)에 따른 변화 요인
 - 경기장 및 관련 인프라의 구조 등 설계 요구 조건이 상향되어 결과적으로 시설 투자 부문과 예비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글로벌 금융 위기와 영국의 경기 퇴조는 민간 투자 저조로 이어짐.

■ 비용에 대한 낙관주의 경계 필요

- 런던 올림픽 사례는 특이한 사례로 볼 수 없으며, 국내외 대형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임.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공공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형 사업을 위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건설비 추정 및 리스크 관리의 도입이 필요함.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7. 2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 누계 수주액 5천억 달러 달성 기념 세미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참여 - 세미나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에 좌장으로 참여
7. 3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 심사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및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 지침 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고시 등
7. 4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건설 부문 협상 전략 검토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빈재익 연구위원 참여 - 한국과 중국의 건설 부문 개방 현황 비교 및 FTA 대응전략 발표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 분야 정책 연구 관련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권오현 실장 참여 - 국토해양 정책 방향 연구에 대한 관계 연구기관 자문회의

■ 최근 연구원 발간물

유형	기관명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턴키 심의 및 낙찰자 결정방식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턴키 발주 방식은 설계와 시공 간의 분절 현상을 개선하고, 기술 경쟁을 통하여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입찰 비용과 설계 심의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설계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정 행위를 통해 얻게 될 기대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자에게 공개 설명 기회를 부여하되, 심의위원 사전 접촉이나 로비 행위에 대해서는 물증 확보시 입찰 탈락이나 향후 일정 기간 입찰 금지 등 과중한 페널티 부여 - 현행 20일에 달하는 설계 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평가를 2~3일 합숙 평가로 진행함으로써 입찰자의 심의위원 사전 접촉 및 로비를 사전에 차단 - 심의위원 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평가 항목별로 합의를 도출해가는 방식을 고려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발주처 중심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전문 분야에 한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형태가 일반적임. - 발주기관에서 외부 심의위원 후보를 사전 등록받는 방식을 지양하고, 발주자가 심의위원 리스트를 직접 작성 선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현행 제도에서는 기술 점수가 낮은 입찰자가 덤핑 투찰을 통해 가중치 방식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기술 경쟁을 목적으로 도입된 턴키 방식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강구 · 턴키 방식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설계 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발주기관별로 다양화하고, 해당 프로젝트별로 핵심 평가 항목을 선정한 후 이를 해당 프로젝트의 RFP(Request for Proposal) 또는 ITT(Invitation to Tender)에서 제시 필요

해외건설 수주 붐 이어가려면

전국민이 페루 헬기 참사자들을 애도하는 가운데 해외건설이 누적 수주 실적 5,000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했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해외 진출에 나선 지 47년 만에 이룩한 값진 기록이다.

진출 지역·업체·공종 다양해져야

해외건설은 2010년 UAE 원전 사업 수주에 힘입어 700억 달러를 웃도는 유사 이래 최고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는 등 1980년대 초, 1990년대 중반에 이어 세 번째 절정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할 수 없다. 해외건설의 절대적 규모는 요즘이 최고지만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1981년 해외건설 수주 세계 2위를 기록하던 1981년 137억 달러에는 못 미친다. 당시 GDP 대비 해외 수주액의 비중은 약 19%였으나 2010년에는 7% 수준에 머물렀다.

앞으로는 지역 다변화, 업체 다양화, 공종 다각화에 힘써야 한다.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중동 의존도가 높다.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중남미 진출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럽·북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상위 10대 업체의 수주 비중이 80%에 달하므로 중하위권 업체들의 분발도 필요하다.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주한 플랜트의 부가가치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해외 건설시장은 토목·건축·플랜트가 비슷한 규모로 삼분하고 있다. 우리의 임금이 높아져 토목·건축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지만 세계적 선진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하다. 고임금을 넘어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플랜트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원전·가스·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또한 건설관리 능력을 배양해 외국 인력을 활용한 토목·건축 분야 수주에도 노력해야 한다.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파이낸싱 능력을 키우고 한국형 민자사업 구도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도시개발과 자원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진출도 유망하다.

정부도 우호적 사업환경 조성을

정부는 건설외교 강화,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유도하고, 기술력·언어·문화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력 육성에 힘써야 한다. 해외 근로자 비과세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분석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는 2011년 약 7조 달러인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향후 매년 5% 정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비춰봤을 때 외국 업체에 개방되는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세계 우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질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가 해외 건설의 진정한 경쟁력을 보여줄 때다. <서울경제, 2012. 6. 25>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